

지방자치실천포럼

04



이달의 Issue |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방향 정립

● 특별대담

-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실천포럼 통권 제69호 / 발행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하혜수 / 편집위원장 이창균
위원 권오철 박진경 김건위 김성주 김대욱 강영주 / 담당부서 연구기획과
연락처 T 02-3488-7361 F 02-3488-7305 / 홈페이지 www.krila.re.kr / 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 본 지방자치실천포럼은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메일 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무료) newsletter@krila.re.k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실천포럼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CONTENTS

April 2015 | vol.69

2015.04

이달의 Issue

-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방향 정립

04 특별대담

-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12 논단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전문성 현황과 개선 방안

- 통합형 재난관리체계에서 지방정부 역할에 관한 소고

- 세월호 사고 1주기에 바라 본 국민안전정책의 실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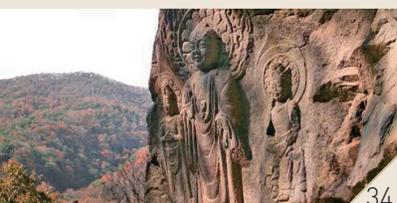
28 국내외 우수사례

- 쿠바의 안전공동체 사례 : 경제성장에 대한 반향

34 지방자치단체 탐방

- 역동적인 도약 희망찬 도시 해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

40 연구원 동정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풍익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일시 및 장소 2015. 2. 9.(월)
울산광역시장실
인터뷰 대상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인터뷰 진행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박진경 수석연구원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올해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以患爲利’의 한 해를 만들어 가고 국가예산 확보와 국내외 투자유치,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을 쫓아다니는 ‘길 위의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이 되신 뒤 가장 역점을 두고 계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김기현 시장 시민들은 전시행정에 식상해 있고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나아지기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탁상행정을 하지 않고 직접 현장에 가보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길 위의 시장’이 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길 위를 돌아다닌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국내

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쫓아다니겠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데 세일즈도 시장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진경 수석연구원 그렇다면 7개월 간의 주요 시정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김기현 시장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경기 침체와 일자리 문제 등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다 보니 7개월이 훌쩍 지나가버렸습니다.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국가예산 확보와 투자 유치에 매달려 왔습니다. 시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 창조와 품격, 온기라는 시정의 3대 축을 설정했고 실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으며, 시와 산하 공공기관, 공기업에도 인사와 조직 등 혁신을 통해 활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밭흙 많이 팔고 세일즈 한다고 쫓아 다니니까 나름 성과도 있었습니다. 외자유치가 사상 최고액인 24억 달러에 이르렀고 국가 예산을 2조 1천억 확보하여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앞으로 울산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박진경 수석연구원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방식으로 17명 광역단체장의 직무수행을 평가한 결과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직무수행평가 결과 1위를 차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시장 울산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서 상당수의 시민들이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에도 이같이 평가해 주신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시청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시정 활동 노력을 높게 사주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24억 달러의 사상 최대 외자유치 실적을 거두었고, 2조 1,447억 원의 역대 최대 국가예산 지원을 확보하는 등 '세일즈'에 성공한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번 밀어줄 테니 열심히 해보라는 시민들의 격려와 기대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설날맞이 전통시장 방문



▲ 직원과의 행복 나누기

박진경 수석연구원 현재 울산은 주력 업종이 흔들리는 등 지역경제 위기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경제위기를 돌파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기현 시장 현재 울산은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에 비철금속 업계마저 어려움이 가중돼 '4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조선해양 분야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3조 원 가량의 사상 최대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20년 만에 무분규 전통이 깨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울산 지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화학 산업도 수출 부진, 가동률 저하 및 유가하락 등에 따라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동차 산업은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만 엔저에 따라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려 시장이 잠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앞으로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비철금속 업계마저 탄소배출권제 시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죠. 따라서 4개 주된 업종이 모두 위기에 직면한 '퍼펙트 스톱', '4중고'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울산은 기존 산업을 업그레이드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과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방안, 두 가지 방향으로 위기 돌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주력산업에 ICT를 접목하는 융복합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박의 연비를 높이면서 충돌이나 각종 사고에 최대한 적게 노출되도록 하는 자동항법 장비와 탐지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스마트십' 개발 사업을 추진하

기로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분야에선 최근 ICT와 관련이 높은 2차 전지산업에 응용되는 탄소소재인 '그래핀' 대량생산 기술을 울산과학기술대에서 개발해 지역 업체에 특허를 이전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신성장동력과 관련해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석유 에너지의 판매·저장·물류·금융 등을 연결하는 대규모의 오일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며, 최대한 여러 나라의 참여를 유도해 위험 분산과 함께 시장 개척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관광산업 개발도 모색 중입니다. 울산에는 1,000미터가 넘는 고봉 7개가 능선으로 연결된 이른바 '영남 알프스'가 있습니다.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등산로를 더 개방하고 케이블카도 놓을 계획입니다. 강동의 해변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양테마 관광단지를 조성하면 산악과 해양이 같이 어우러지는 모습의 관광단지로 각광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진경 수석연구원 창조경제 핵심사업으로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기현 시장 현재 싱가포르와 멕시코만 근처에 오일허브가 있습니다. 아시아로는 싱가포르가 전체 오일허브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우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6년째 추진해온 끝에 지난해 오일허브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신한만에 오일 저장탱크를 조성한 뒤 이를 매각 또는 임대해 오일 마켓을 형성하고자



▲ 영남 알프스 간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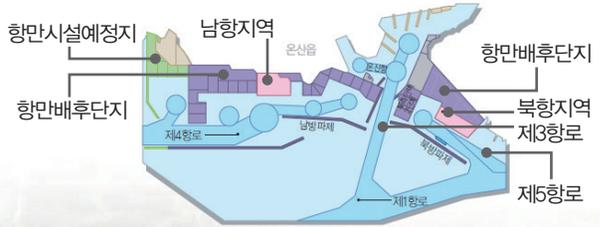
▲ PDH 공장 합작투자 MOU 체결식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오일 값이 떨어진 지금이 기름을 사놓을 적기인데 사놓으려 해도 저장할 곳이 없습니다. 오일허브 사업은 가까이에 항만을 갖고 있고 석유화학업종도 같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울산은 그런 면에서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일허브를 갖추면 기존의 석유화학단지들 좀 더 키울 수 있고, 석유 거래가 있으면 금융을 포함한 신사업이 발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신항만 북항공사와 더불어 남항지역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금융 산업 육성 시책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박진경 수석연구원 산업단지가 많은 울산은 안전 문제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실 텐데요, 특별히 안전문화를 정착시키실 방안은 있으신가요?

김기현 시장 울산은 노후화된 산업단지가 많아 안전 문제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산업단지의 안전 관리를 위해 안전정책관실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 1년 내내 감시·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안전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과 내용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안전체험 교육센터 설립 등 인프라를 확충해 안전 문화가 일상에서 스며들도록 할 생각입니다.



▲ 동북아 오일허브 조감도

박진경 수석연구원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신지 여쭙 보아도 될까요?

김기현 시장 '정치'가 시대정신을 읽고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면, '지방자치'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지방자치가 따로 논다면 좋은 행정이 되지 못할 것이고 양자가 긴밀히 연계되어야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동시에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항상 소통과 개방의 마인드를 견지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경 수석연구원 여당 정책위의장까지 지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담이나 분권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시장 재정분담 비율에 대해 '2할 정치'라고 할 때는 사실 피부로 와 닿지는 않았습시다. 정치권에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논의할 때도 지방정부의 얘기는 충분히 듣지 못하고 중앙정부 얘기만 듣고 당의 의사를 결정하기 마련이죠. 그런 시스템에서 움직이다 보니 지방정부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 실제로 잘 와닿지 않았던 거죠. 직접 살림을 살아보니 국가에 의존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중앙정부가 각종 사업은 지방으로 이관해 놓고 그에 따른 예산은 제대로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일은 지방에서 하는데 돈은 중앙에서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지역 살림살이보다 중앙 눈치 보기에 급급합니다.

울산도 광역시라고는 하지만 중앙정부가 돈을 주지 않으면 SOC 사업 같은 건 아예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더 심각해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결정 없이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 봉급 주는 것 말고는 없는 상황인데 이게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박진경 수석연구원 그렇다면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비율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기현 시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제도적, 현실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정권이 제도적 한계에 갇혀 세출구조는 중앙과 지방이 4:6인 반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의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줄은 중앙이 쥐고 있으면서 사업은 지방이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실물경제의 침체로 세입 증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복지 수요는 폭증하는 반면 복지 재원의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인해 가용 재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방정부에 자기재원을 좀 늘려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선진국 수준인 6:4 정도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 확대 등 국세의 지방 이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방교부세율은 현행 19.24%에서 적어도 21% 이상으로 확대가 되어야 하며, 지방소비세도 현행 11%에서 16%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 개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사무인 보육, 노인복지 지원을 매칭사업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경 수석연구원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시장 건축에 비유하자면 기본설계와 골격을 짜는 게 국회의 일이라면 행정은 창틀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환풍기는 어디에 달아야 하는지 현장에서 세세한 것을 집행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더 바빠졌고 민감한 내용이 많아 긴장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여의도 정치를 하면서 후회되는 것 하나가 지역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예산은 SOC 사업을 제외하고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복지의 대부분을 지자체가 집행합니다. 실제로 지자체 살림은 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중앙 정

치권이 지자체를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재원을 배분할 때 주로 중앙 정부의 말을 많이 듣고 지방정부의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기회가 온다면 중앙과 지방 재원 배분 틀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경 수석연구원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시정 철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시장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거짓말을 잘한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약속해 놓고 선거 마치면 그만이다.'하는 의식을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약속하면 지키자, 함부로 약속하지 말자, 그렇지만 약속하면 지키자.'는 것이 평소의 신조입니다. 공약도 지킬 수 있는 것을 제시했고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전국 광역지자체장 가운데 김기현 울산시장의 공약이행률이 가장 높았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아울러 저는 판단할 때는 신중하게 하지만 일단 결정하면 불독처럼 한 번 물면 놓지 않고 악착같이 관철해 나가는 성격입니다. 시정도 결정하기 전까지 신중하지만 한 번 결정하면 끈질기게 몰두하고 집중해서 결실을 만들어 내도록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전문성 현황과 개선 방안¹⁾



윤건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은 가장 중요한 국가 목표가 되어 왔다. 이것은 실제 국민소득의 비약적 성장이라는 실제적 형태로 나타났으나 이와 비례하여 국민 행복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²⁾ 재난안전 문제는 이러한 국민 행복 문제와 밀접히 닿아 있다고 본다.³⁾ 실제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인식은 행복인식과 유사하게 매우 낮은 편이다.⁴⁾ 앞으로 국가의 중요한 목표가 국민의 행복 증진이라고 할 때 그 전제조건으로 재난안전 분야의 개선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정책우선순위의 하나는 실제 재난안전정책을 총괄·관리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특히 직접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높지 않아 실제 재난안전 상황 발생시 대처가 미숙할 경우 이는 직접적인 국민의 피해와 행복감 상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하에서는 지난 2014년 9월 실시한 재난안

1) 본 설문조사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산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료관리규칙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았다

2) 201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감은 10점 만점에 6.0점에 불과하고 이는 OECD 평균(6.6점)에도 미치지 못한다(통계청, 2014: 417).

3) 임근식(2012)의 지역주민의 삶의 질 영향요인 연구에서 안전환경은 주민의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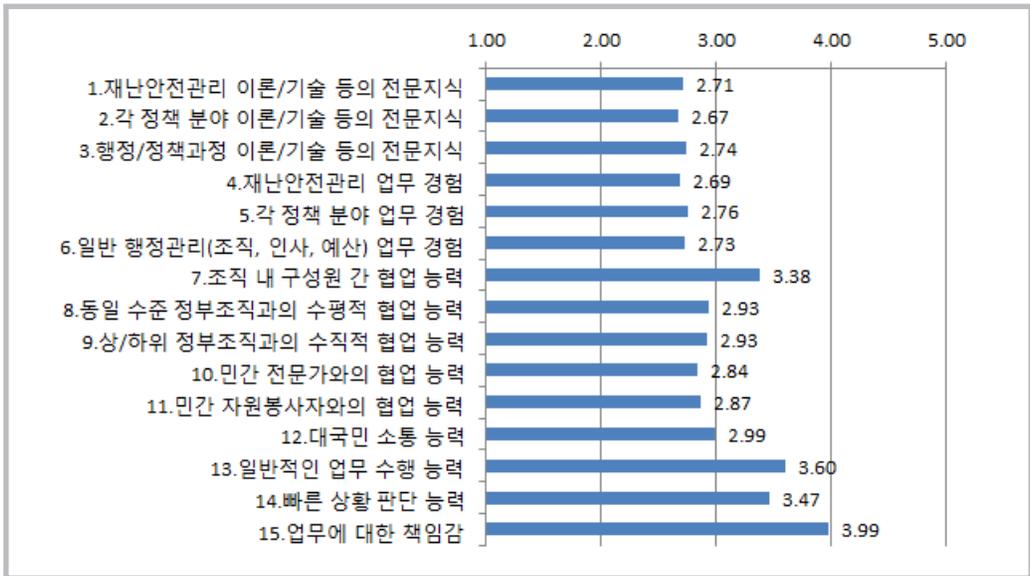
4)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인식(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은 범죄안전의 경우 100점 만점에 9.1점, 교통사고의 경우 9.4점, 정보보안의 경우 12.5점, 신종 전염병의 경우 12.9점, 자연재해의 경우 23.3점, 건축물 및 시설물의 경우 26.2점에 불과하다(통계청, 2014: 315).

전관리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전문성 현황과 영향요인,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전문성 현황과 영향요인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재난안전관리 공무원들은 자신의 전문성 정도에 대하여 비교적 낮게 응답하고 있다. <그림 1>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5점 만점에 4점 이상을 획득한 항목은 없고, 3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도 ‘업무에 대한 책임감’, ‘일반적인 업무 수행 능력’, ‘빠른 상황 판단 능력’, ‘조직 내 구성원 간 협업 능력’ 등에 불과하다. 특히 전문지식이나 업무 경험이 낮게 나타나며, 협업 능력의 경우에도 ‘조직 내 구성원 간 협업 능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통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전문성 현황



(1: 매우 미흡, 2: 미흡, 3: 보통, 4: 약간 충분, 5: 매우 충분)

이러한 낮은 전문성의 영향요인 설문에서 1순위 응답 결과는 <표 1>과 같다.⁵⁾ 조직요인

5) 선행연구분석, 공무원 및 전문가 인터뷰, 신문기사 내용분석 등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간접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조직요인, 환경요인, 직무요인, 개인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중에는 '조직 인력 부족'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순환보직 관행'이나 '성과관리 미흡'이 높게 나타났다. 환경요인 중에는 '낮은 정책우선순위'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난안전관리 정부조직체계 미흡', '재난안전관리 재정 투자 미흡' 등이 높게 나타났다. 직무요인으로는 '직무의 광범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한 업무 강도'나 '직무 복잡성'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요인으로는 '낮은 직무/조직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난안전관리 업무경험 부족', '재난안전의 중요성 인식 미흡' 등이 높게 나타났다.

〈표 1〉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전문성 영향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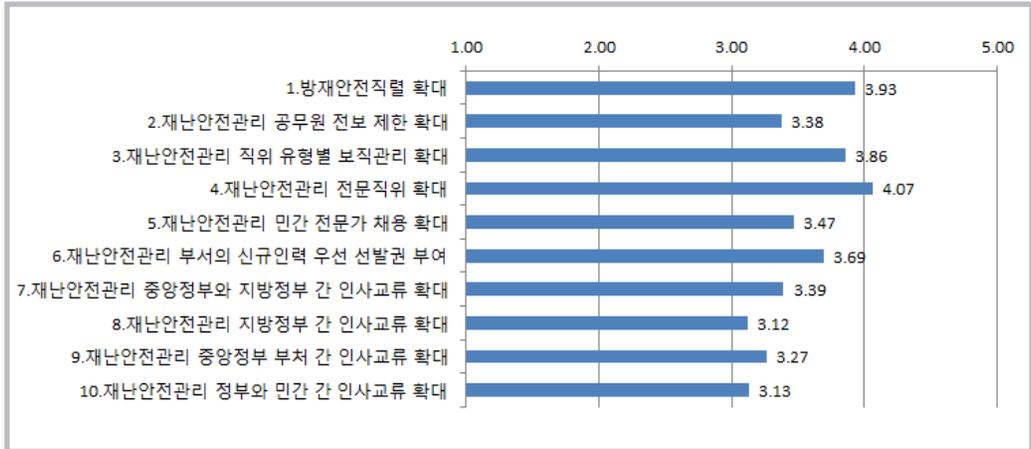
구분	조직요인		환경요인		직무요인		개인요인	
	항목	1순위 응답률	항목	1순위 응답률	항목	1순위 응답률	항목	1순위 응답률
내용	조직 인력 부족	37.8	재난안전관리 정책우선순위 낮음	28.7	직무의 광범위성	48.3	낮은 직무/조직만족	33.5
	순환보직 관행	17.7	재난안전관리 정부조직체계 미흡	24.9	강한 업무 강도	17.2	재난안전관리 업무 경험 부족	31.1
	성과관리 (평가/보상) 미흡	17.7	재난안전관리 재정 투자 미흡	16.3	직무의 복잡성	16.3	재난안전의 중요성 인식 미흡	25.4
	불공정 인사	7.2	안전불감증 문화	13.4	업무 수행 결과의 불확실성	10.5	낮은 업무 수행 동기	5.7
	조직 간 갈등 내지는 비협조	7.7	재난안전관리 시설/장비 미흡	7.7	직무의 단순성	7.7	낮은 직무/조직 몰입	3.8
	교육훈련 미흡	7.2	재난안전관리 민간 전문인력 부족	4.3				
	권위주의 문화	2.4	재난안전관리 학문적 기반 미흡	4.3				
	조직구성원 간 의사소통 미흡	1.9						
	약한 리더십	0.5						

III.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전문성 개선 방안

이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전문성 제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 채용·배치, 교육훈련, 성과관리의 세 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채용·배치와 관련하여 〈그림 2〉는 여러 채용·배치 대안의 필요성 인식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대안들 중에는 '재난안전관리 전문직위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방재안

전직렬 확대’, ‘재난안전관리 직위 유형별 보직관리 확대’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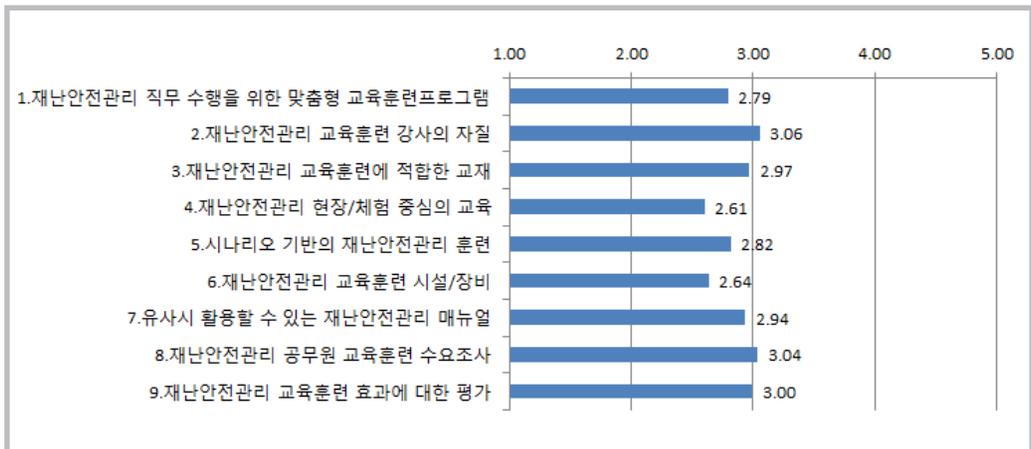
〈그림 2〉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채용배치 개선 대안



(1: 매우 불필요, 2: 약간 불필요, 3: 보통, 4: 약간 필요, 5: 매우 필요)

공무원 전문성의 증진을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그림 3〉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교육훈련 충분성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훈련 구성요소의 충분성 정도가 낮

〈그림 3〉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교육훈련 구성요소 충분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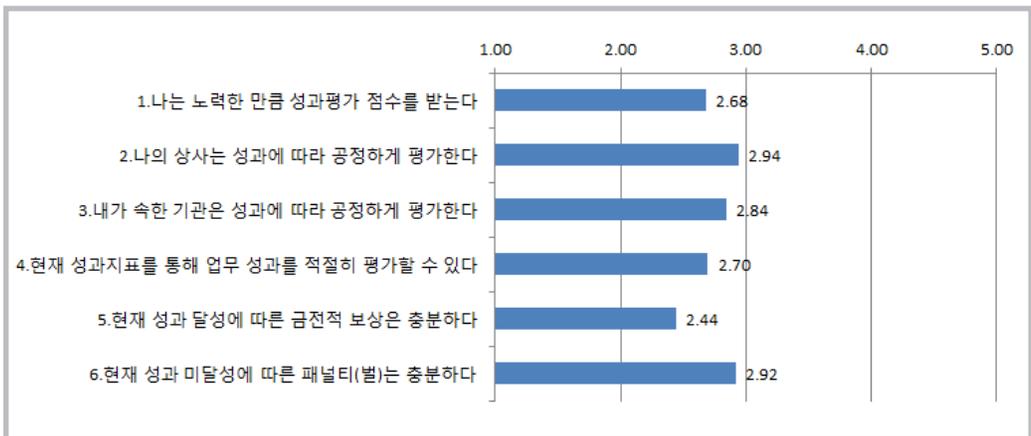


(1: 매우 미흡, 2: 미흡, 3: 보통, 4: 약간 충분, 5: 매우 충분)

게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재난안전관리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 시설/장비,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우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무원 성과관리는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 중 하나가 된다. <그림 4>는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공무원들의 성과관리 각 구성요소별 충분성 정도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통 이하의 충분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성과 달성에 따른 금전적 보상의 충분성, 노력한 정도에 따른 성과평가 점수 획득의 충분성 정도, 성과지표의 적정성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성과관리 구성요소 충분성 정도



(1: 매우 부정적, 2: 약간 부정적, 3: 보통, 4: 약간 긍정적, 5: 매우 긍정적)

IV. 나가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 수준에 대한 인식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전문지식이나 경험, 협업 능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는 조직 인력 부족 문제, 순환보직 관행, 낮은 정책우선순위, 미흡한 조직체계, 직무의 광범위성, 낮은 직무만족, 업무경험 부족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전문성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채용·배치 측면에서는 전문직위 확대나 방재안전직렬 확대, 직위 유형별 보직관리 개선 등이, 교육 훈련 측면에서는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 시설·장비 개선,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 설

계,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성과 달성에 따른 금전적 보상 확대, 성과평가의 공정성 강화, 적절한 성과지표 설계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국가 재난안전관리 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전문성 확보는 늦출 수 없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국민안전처 출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발표 등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재난안전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는 현 시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적기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 출범으로 다양한 공무원 전문성 제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전망은 더욱 밝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수행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 이를 기초로 한 끊임없는 개선 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윤건·류충렬. (2014). 재난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및 관리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임근식. (2012).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강원도 시·군을 중심으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10(1). 47-89.
- 통계청. (2014). 2013 한국의 사회지표.

통합형 재난관리체계에서 지방정부 역할에 관한 소고



강영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I. '국민안전처'로 충분한가?

온 국민을 침통에 빠져들게 했던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에 관한 위기감은 늘 있어 왔으나 그 안전망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놀랄 만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과연 우리의 정부시스템과 사회시스템의 어디가 문제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고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가 단행한 개혁 중에서 가장 가시적인 것은 '국민안전처'라는 새로운 중앙정부 부처를 만드는 것이었다. 분산된 재난대응체계를 통합해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을 더 높여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II. 안전은 '공공재'다

안전 즉, 재난안전관리 서비스는 공공재다. 공공재의 성격인 배제불가능성, 비경합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즉, 안전한 사회는 한 번 만들어지기만 하면 그 효용은 그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누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안전하다고 해서 나의 안전함이 덜해지지 않는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안전이 공공재라면 이를 제공하는 책임은 민간이 아닌 정부에게 있다.

지방과 중앙에 여러 단계의 정부가 있는 오늘날과 같은 정부조직에서 재난안전관리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공급하는 것이 좋을까?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오우츠(W. Oates, 1972)는 공공재를 지방공공재(local public goods)와 국가공공재(national public goods)로 나누어 보고, 지방공공재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공급에 관해 획일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내맡기는 체제가 더욱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각 지역마다 필요한 안전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차이가 있다면,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수요가 반영된 결정을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서비스처럼 국민 전체가 함께 소비하는 국가공공재의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의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낫다.

오우츠의 논리에 의하면 재난안전관리 서비스는 평상시에는 지방정부가, 비상시에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 재난안전관리 서비스는 평상시에는 지방공공재, 비상시에는 국가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평상시에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를 들어, 비가 올 때에 홍수 예방 차원에서 배수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나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여건을 개선하는 일, 재난안전 대비 훈련 등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수요에 관련된 것이므로 학교나 공원 서비스와 같은 지방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

반면, 재난안전 사고가 발생한 비상시에 신속한 대응과 철저하고 체계적인 복구를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첨단장비들-구조함, 헬기 등-은 규모의 경제를 가지므로 각 지역에서 구비하는 것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국방서비스처럼 온 국민이 함께 소비하는 국가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지방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평상시의 재난관리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국가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재난관리 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III. 통합형 재난관리체계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재난관리는 평상시의 예방과 대비가 더욱 중요하다. 사고는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 재난의 예방과 대비 단계를 평상시 재난안전관리라고 보고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단계를 비상시 재난안전관리라고 볼 수 있다.

는 것이 발생하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²⁾ 따라서 평상시 재난관리의 주체가 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미국과 일본도 재난관리와 대응에 있어 일차적인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다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도 기본법으로 평상시 국가재난관리의 책임이 주정부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도 재난 대응의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합형 재난관리체계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방정부는 평상시 재난관리의 중심 주체가 되지만 평상시와 비상시의 모든 단계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우선 평상시 지방정부의 역할은 안전 관련 법규 집행, 재난관련 훈련 및 안전의식 교육, 구호물자 비축, 관련 부서 간 상호지원 계획 마련 등이다. 비상시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앙 컨트롤 타워 조직의 통제 하에 신속한 자체 초동조치, 정보전달, 구조구급, 피난유도, 구호, 피해시설 복구, 공공서비스 복구 등을 맡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의 특징은 주로 예방이나 대응보다는 재난 이후 재난 관리 단계인 대응·복구 단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의 김영모 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재난의 예방에 들이는 비용이 이후 복구에 들이는 비용에 비해 현저히 작다.³⁾ 미국이 전체 재난 관련 비용 중에서 예방에 들이는 비용이 60%, 영국이 3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예방을 위해서는 재난 발생 직후 원인 조사나 분석이 명확히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복구가 완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로 인해 유사사고 및 피해상황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게 된다.⁴⁾ 예방과 대비의 중요성에 비해 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과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2) 박근혜 정부의 국가재난관리 국정과제 세부 내용의 하나인 통합재난대응시스템 구축 항목에서는 예방 중심의 선제적 재난관리 및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예방 중심의 선제적 재난관리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3) “지난 4월 1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부산지역 해양 수산 관계자들이 모여 ‘해양안전 세미나 및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형 해양사고 대응사례 및 교훈의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영모 교수는 ‘한국은 재난 예방과 실패 비용 중 실패 비용의 비율이 85% 수준으로 미국(40%), 영국(65%)에 비해 높다’며 ‘예방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부산일보 2015. 4. 1. “잔인한 4월 잊지 말자”)

4) 경남신문, 2014년 9월 24일. [해외 기획취재] “재난·위기 관리시스템, 지방정부의 역할(1) 우리나라 재난·위기 관리시스템 현황”

따라서 예방과 대비의 기능 수행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를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도 최근 재난 유형별 분산형 조직에서 유형과 상관없이 기능 중심 업무 수행이 가능한 통합형 재난대응 방식으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 각 지자체마다 안전관리 총괄 및 전담을 위한 조직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다.⁵⁾ 그러나 예방·대비기능과 대응·복구의 기능으로 구분되는 재난관리기능 중심의 조직 개편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⁶⁾ 또한 기능 중심의 조직에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위험 예측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해 나갈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신설된 방재안전직렬에서 선출되는 인력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IV. 나오며

안전은 공공재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은 각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 탓만 할 수는 없다. 시민 스스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⁷⁾ 얼마 전 일본에서는 해저터널을 통과하던 열차에서 차량이상 사고가 발생했으나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여 전 승객이 모두 무사히 탈출하였다고 한다. 비상시 대처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자신감과 다른 이들에 대한 신뢰가

5) 2013년에 행정자치부(당시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차원에서 시·도, 시·군·구에 안전관리 총괄 및 전담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지자체 안전관리 체계 대폭 강화-안행부, 각 자치단체에 안전 컨트롤 타워 구축 '13.5.7 보도자료, 안전행정부). 2015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서도 시·도 재난안전조직을 실·국·본부급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6) 기능 중심의 재난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접근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8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정 및 고시한 국가재난관리기준에 따라 국가재난관리 업무를 재난관리 주 업무 4단계(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재난관리 지원업무 5단계(자원관리, 정보관리, 홍보, 평가환류, 행정재무)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때, 예방업무는 예방정책, 예방계획, 위험지구, 조사분석, 경감활동, 예방활동으로 구성되고 대비업무는 대비활동, 비상계획, 비상운영조직, 교육훈련으로 구성되며, 대응업무는 초동대처, 상황관리, 현장조치로, 복구업무는 피해조사분석, 복구사전준비, 복구활동으로 구성된다. 안전 사회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13.5.2)에서는 국내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체계는 총괄 전담부서 없이 시·도는 재난유형별로 산재되어 있고, 시·군·구는 대부분 건설부서가 재해 예방·복구 중심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다.

7) 그러나 최근 시민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시민 2,6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96.2%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직후 실시된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매우 심각하다’가 5월 조사의 73.1%에서 11월 조사의 56.7%로 떨어졌다. 시민안전의식 수준에 관한 질문에서도 지난해 5월 평균점수는 4.1점인 반면 11월 평균점수는 4.2점으로 소폭 올랐다.”(아주경제, 2015.1.6. “서울시민 안전불감증 여론조사 결과 이전보다 심각성 인식 떨어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평소 훈련을 통해 대처능력을 길러놓았기 때문이다.⁸⁾

‘비상시에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대피하여 주십시오.’

지하철 전자광고판의 당연한 문구가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될 날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건위·이병기(2008).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은성·안혁근(2009).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난안전 관리의 효과적 협력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김은성·정지범·안혁근(2009). 「국가재난안전관리 정책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송창영(2013).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방안」. 안전행정부.
 - 윤종설(2011). 「재난안전분야 지방조직의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이준구(2004). 「재정학」 제3판. 서울: 다산출판사.
- 외 다수

8) 일본 교토부에서는 자주방재부라는 팀을 만들어서 시·정·촌 가운데 정 내에 6286 조직체를 만들어 시민방재 행동요령과 지침대로 스스로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방재의 역할, 구실, 담당과 내용은 동 단위 동민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인구에 비례해서 행동요령 등이 작성돼 있고 행동계획에 준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방향과 방법, 경로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대피해야 된다는 것을 숙지하게 한다(경남신문, 2014년 10월 8일. [해외 기획취재] “재난·위기 관리시스템, 지방정부의 역할(3) 일본 교토시 위기관리실의 재난대응체계”).

세월호 사고 1주기에 바라 본 국민안전정책의 실효성

우리의 기억 속에는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추억과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추억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추억도 어느 순간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빨리 잊고 싶어하는 추억이 오히려 뺏속까지 파고들면서 오랫동안 가슴깊이 상처로 남아있기도 한다. 너무 큰 상처가 되는 경험은 무의식 속에서도 개개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여 오랫동안 고통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을 정신의학적으로는 “트라우마(trauma)”라고 한다. 트라우마는 “재해를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적 반응”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어 간다. 어린 자식과 가족을 그렇게 허망하게 보낸 부모들은 물론 국민 모두가 트라우마란 용어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세월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의학적, 심리적 치료 등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하여 안정을 찾고 차츰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방법일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 차원에서 세월호 사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어야 하며, 무엇이 있을까? 세월호 사고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대안과 조치들을 수립 중이거나 이미 시행 중인 것들도 많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방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마도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일 것이다. 새롭게 만들어진 법 제도나 방안들이 대형 재난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만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병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세월호 사고 이전에도 관련 전문가나 정부 차원에서 수많은 재난관리 방안들이 제시되어 새로운 제도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사고에 나타난 정부의 재난 안전관리는 과거 대형재난(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등)이 발생할 때마다 제시되었던 각종 대책들의 연장선으로 궁극적으로는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대형재난 이후 발표되는 각종 대책들의 실효성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제시되어 설명되어지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전통적 재난관리 패러다임에서 재난 거버넌스(Disaster Governance) 패러다임 전환”과 “재난 시나리오별 매뉴얼(manual) 작성”을 통한 재난 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전통적 의미에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는 유능한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재난시 정부가 주도적으로 재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원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민을 재난관리의 대상 또는 재난시 필요에 따라 동원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재난관리와 관련된 제반 정책이나 대안은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국민들은 이에 순응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기술 관료주의가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한다. 이는 국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또는 지적 수준이나 경험들이란 것이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전문성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발생 이후 수많은 인명을 구하거나 인명구조에 지역주민이나 민간 잠수사, 자원봉사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매일 알려진 사실이고, 실제 수색참여 어선 269척, 자원봉사자 5만여 명, 잠수사 6,300여 명(군인 포함)이 직접 참여하여 수많은 인명을 구하거나 희생자들을 인양했다.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난대응 민관협력실태 자료집, 2014-1)

반면, 정부에서는 재난 관련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날(14.4.16)에 중앙구조본부(당시 해양경찰청), 중앙사고수습본부(해양수산

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당시 행정안전부)를 각각 설치(해당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별도 설치)했다가 다음 날(14.4.17)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로 통합하였다. 또한 정부의 사고수습 대책본부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숙함과 의사결정 과정의 혼란을 국민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전문성 측면에서도 지역주민이나 자원봉사자들의 현장 대응 및 전문성 수준을 사고대책본부나 전문가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탁상행정이란 비난도 들어야만 했다. 특히,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재난만 발생하면 자칭 전문가들이 불나방처럼 나타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나 원론적 수준의 대안들을 제시하여 묵묵히 현장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참여자들에게 더 큰 불신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재난관리 패러다임에 기초한 재난관리는 이미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 사고에서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음에도 이후 동일한 방식의 재난관리 패러다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특히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 사고의 경우는 기존의 재난대응방식이 전환되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행자부 추계 130만 명)를 기초로 재난을 극복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제 전통적 재난관리 패러다임에 대한 냉정한 성찰과 더불어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 그리고 협력에 기초한 정부3.0 기반의 재난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모



색해야 한다. 재난 거버넌스는 정부 주도의 일방향의 재난관리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양방향의 재난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난관리 과정에 국민들의 경험과 지혜를 집적하여 재난대응 대책 도출과 참여를 통한 재난예방 등 재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이는 사회의 발전에 따라 재난은 더욱 복잡화,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데 비해, 실효성 떨어지는 제도나 대책은 물론 재난 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필연적인 변화이다.

다음으로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을 의미한다. 이중 재난예방과 대비는 사전적 활동으로 재난대응과 복구는 사후적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되면 언제나 사전적 재난 준비상태가 문제로 지적되곤 한다. 한마디로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가 핵심 문제이자 쟁점인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 재난관리의 사전활동인 재난예방과 대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동안의 재난관리와 관련되어 수십 년 동안 반복하는 것이 아마도 재난매뉴얼을 새롭게 만드는 것일 것이다. 기존의 매뉴얼이 재난상황이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서 새롭게 작성하였다기보다는 새로운 정권 또는 재난부서의 신설 등의 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재난 매뉴얼도 새롭게 작성된 측면이 있다. 일반론적 의미에서 재난 매뉴얼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이나 대응방법을 기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외적 환경변화에 맞추어 굳이 기존의 매뉴얼을 버리고 새롭게 작성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기존의 매뉴얼에 없는 새로운 문제점 및 개선점이 있다면, 기존 매뉴얼에 추가하거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재난관리 매뉴얼 등을 상세히 검토해 보지는 못했지만, 방법론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하나만 제시한다면 시나리오별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manual)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난 매뉴얼의 기본 성격은 현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래 특정 시점, 장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예측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재난 매뉴얼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여건을 반영하여 미래의 재난상황에 최적의 대응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미래 행동지침서이다. 따라서 재난 매뉴얼은 불확실성 또는 불확정성에 기초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재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상황을 설정하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역으로 준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앞서 제시한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안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재난 관리 패러다임을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재난 관련 매뉴얼도 시나리오별 재난대응 매뉴얼이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재난관리에 있어 민관협력과 시나리오별 매뉴얼이 가능한 이면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정부3.0, 빅데이터(big data) 등 사회적 기반요소들이 축적된 것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요소의 구축은 국민들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고 이를 결집하는 힘 즉, 집단지성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집단지성을 통하여 재난관리에 관한 한 국민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화하고, 이를 재난상황에 적용하거나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재난관리에 있어 사회적 대응성과 복원력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키는 원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1주기(14.4.16)가 다가오고 있는데 사고 당시 다짐했던 그 많은 약속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희생자 유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들의 가슴에 남은 상처가 쉽게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상처치유와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된 여러 대책들이 또 다른 상처로 남지 않도록 시의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쿠바의 안전공동체 사례 : 경제성장에 대한 반향

우리가 알고 있는 쿠바는 지구의 반대편 미국 옆 가까이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로 카스트로가 이끌고 있는 우리와는 멀게만 느껴지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그리고 『노인과 바다』로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헤밍웨이가 사랑하며 작품 활동을 해온 나라이다.

쿠바는 카스트로가 체 게바라와 함께 미국에 대항하면서,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던 생활에서 경제봉쇄로 국가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절대적인 지원국이었던 소련마저 붕괴돼 에너지 공급부족에 봉착했고 이에 현대에 역행되는 사회구조로 변하게 되면서 사회순환적인 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세계적인 자원과 석유에너지 고갈에서 오는 대안으로 각광을 받는 국가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쿠바는 1990년대 초 소련 연방이 붕괴되면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쿠바의 수출입 시장은 80%가 붕괴되었으며, 원유 수입은 13~14백만 톤에서 4백만 톤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92년에는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 조치로 인해 쿠바에 정박했던 배는 미국 입항이 거부되었으며, 해외 자본에 대한 쿠바의 접근은 봉쇄되었다. 그로 인해 쿠바의 버스는 멈췄고, 공장은 문을 닫게 되었다. 석유수입이 없이는 쿠바가 발전기를 돌릴 수 없었기에 전국적으로 정전이 지속되었으며, 식료품은 바닥났고 사람들은 기아에 시달렸다. 또한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실조와 빈혈에 시달리는 임산부, 갓 태어난 아이들의 저체중 등 쿠바에서 먹을 것이 없었다는 사실은 재앙이 되었다.

쿠바에서는 이러한 위기 속에 특별한 기간(Special Period)을 창출



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하게 되었고, 2000년대에 이르러 UN으로부터 농업, 보건, 안전 등 몇 개의 분야에서 모범국가로 주목되었다. 특히 유엔이 선정한 방재 모델국가라는 수식어를 얻게 되었다. 오늘날 쿠바가 모범국가로서 주목받게 된 중심에는 지역공동체의 자조성이 있었다. 협력, 환경보전, 절감의 가치를 반영하는 지역공동체의 지역사회 탄력성 중심의 접근방법으로 위기의 해법을 찾게 된 것이다.

쿠바는 우리나라가 매년 겪게 되는 태풍의 피해에서처럼 수없이 다가오는 위협적인 허리케인에 훈련된 사회의 조직과 시민의 협동과 주택 구조를 보여주며 친환경 자재로 공동체 마을 만들기 대안을 만들어 이에 대응하여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에 비해 세계 첨단을 자부하는 미국의 허리케인에 의한 극심한 피해를 조명하며 대자연의 위력 앞에 파괴되는 사회적인 문제와 인간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엔이 선정한 방재의 모델국가로 선정된 쿠바는 애완동물까지도 대피소로 피난을 할 정도로 재난 대비에 대한 모범국으로 사전 교육과 훈련에 임해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이에 쿠바 사례를 소개하여 차후 우리나라의 안전을 향상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¹⁾

쿠바는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의 탄력성을 가지고 경제위기를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UN에서 인정한 방재 모델국가이다. 2005년 미국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사망자 1,836명, 행방불명 705명, 가옥상실 100만 명이 발생하였으며, 대규모 참사로 기록되었다. 대조적으로 1995년~2006년 쿠바에는 열대폭풍우 3회, 허리케인 8회 피해를 입었으나 사망자가 연평균 3명 정도로 사상자가 전무했다. 이는 지역공동체 차원의 연대를 통한 대응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열대폭풍우와 허리케인으로 인한 사상자가 거의 전무한 국가를 탄생시킨 배경에는 지역공동체 차원의 철저한 재난대비와 재난발생 시 지역공동체 차원의 자발적 대응,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에 의한 재난 복구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쿠바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 주, 무니시피오 정부뿐만 아니라, 패밀리닥터, 쿠바여성연맹, 혁명방위위원회 등의 지역공동체 단위로 해저드맵, 즉 재해 예측지도를 미리 작성한다. 해저드맵(Hazard Map)을 활용하여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긴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해저드맵에는 붕괴위험이 있는 주택과 대피소에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누가 도울 것인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사전파악을 포함한다. 해저드맵을 활용

1) 본 내용은 최인수(2013),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재해 주민안전망 구축방안」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한 긴급계획은 직장과 단체, 기업, 기구별 개별계획을 포함하여 전국 차원의 상향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매년 '메테오르'라고 불리는 지역공동체 차원의 방재훈련을 실시함으로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철저하게 재난을 대비한다.

쿠바의 재난 대응체계는 열대폭풍우나 허리케인 내습 예상시 초기경계(사건발생 96시간 전)를 발령하고, 이후 주의단계(72시간 전), 경보단계(48시간 전), 경고단계(24시간 전)를 발령한다. 이때 정부는 가스와 전기공급을 중단하고, 시민방위사령부 설치, 긴급계획의 재검토, 대피용 교통수단과 시설을 확보한다. 지역공동체에서는 혁명방위위원회와 학교장, 여러 기관의 대표, 패밀리닥터들이 각자의 역할을 서로 확인하며, 피난 수순과 피난장소, 필요한 자재를 확인한다. 이때 학교의 지붕을 해체·격납하는 공동체, 지역의 수확 가능한 농산물의 수확을 돕는 공동체 등 지역의 연대의식에 기초한 지역공동체 차원의 다양한 대응을 하게 된다. 재난 발생 초기경계 발령 시 해저드 맵을 통한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지는데, 취약 지구 주민들이나 취약 계층부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여성연맹이나 지역으로 핵심인 패밀리닥터 등도 참여하여 일상적으로 확인하는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자발적 대응이 이루어진다.

재해 후 국가시민방위센터는 비상체제 해제를 발표하고 오로라작전이라고 불리는 복구단계가 발표되면 주와 무니시피로의 복구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를 통한 재해복구가 이루어진다. 재난 후 모든 가옥이 복구될 때까지 건축자재 생산량 전부를 파손주택 재건에 사용하는 등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각 직장에서는 직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유급을 지원, 자원봉사자들이 재해지역으로 나간 업무 공백을 남은 동료



〈그림 1〉 쿠바의 방재훈련 및 재해복구



〈그림 2〉 쿠바의 재해복구 및 재해 자원봉사

들이 나누어 처리한다. 이때 정부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와 주거를 제공한다. 이처럼 쿠바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에 의한 재난 복구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으로 재난과 관련하여 국제적 흐름을 살펴보면 예방(prevention) 전략에서 회복탄력(resilience) 전략으로 변화되고 있다. 회복가능전략, 회복탄력전략 즉 회복가능도시는 (Resilient Cities)는 2007년부터 UNISDR 및 ICLEI 등 주요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유행어가 되었다. ICLEI's Analogy에 의하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회복가능성(Resilience) ÷ 위험(Risks)”으로써 설명하고 있다.

그러한 회복가능성, 회복력, 회복가능도시 등은 회복탄력성, 탄력성으로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지구적 및 국가적 차원의 사고(thinking)이고, 지역적 차원의 대응



〈그림 3〉 UNISDR의 회복 가능한 도시 만들기

(acting)이다. 즉 회복가능도시 및 공동체(Resilient Cities & Communities)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 및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지역사회 탄력성 구축을 위한 쿠바의 시사점은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난 재해 대응에 대한 변화요구와 주민참여를 통한 국지적 맥락을 반영한 재해대책의 근본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대처방안이 필요하겠다. 셋째, 대형재난 등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지역단위, 지역사회 회복탄력성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및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 중심의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회복탄력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역동적인 도약 희망찬 도시 해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

복되고 즐거운 일이 많은 조짐(상서로운)의 땅, 서산은 문헌상 이미 삼한 시대부터 그 유래가 확인 가능한 유서 깊은 지역으로, 지형적인 특성상 일찍부터 중국과의 접촉이 활발하여 대륙문화 수입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서산의 이러한 문화적 선진성은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태안 백화산 마애여래삼존상 등의 백제문화의 기반이 됨은 물론, 신라, 나아가 일본의 아스카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서산 천수만 -
철새도래지



이처럼 오랜기간 교역과 문화의 중심이 되어 온 서산은 최근 대규모의 간척사업, 대산지구 임해공업지역 등 서해안 개발은 물론, 서산테크노벨리 등 대규모 산업단지, 석유화학산업 및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또한 대산항 건설과 서해안 고속도로의 장점을 살려 중국 등과의 교역이 활발해지고 있는 등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역동적이며 희망찬 도시로서 그 이름을 알리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은 서산의 이름을 세계인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서산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완섭 시장은 '2015 대한민국 창조경제 대상'을 수상한 경영행정의 전문가로 '해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의 비전 달성을 위하여, 삶이 풍요로운 농·축·수산 도시, 활력이 넘치는 산업경제도시, 편안하고 안전한 생태·환경도시, 문화가 어우러진 국제관광도시, 희망차고 건강한 교육·복지도시의 시정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시정방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서산은 경제도시에 기반한 삶의 질적 제고노력은 물론, 천혜의 자원과 역사를 통하여 가져온 농·축·수산의 먹거리와 역사관광자원의 보고이다. 여기서는 특히 후자에 초점을 두고 서산을 소개한다.

삶이 풍요로운 농·축·수산 도시

농·축·수산도시라는 특징적 수식어에 걸맞게 서산은 자연의 혜택과 주민의 노력이 어우러져 다양한 명품을 자랑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농·축·수산 각각의 부문에서 대표적인 것만 소개한다.

먼저 농산부문의 대표적 먹거리로는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뜰부기쌀, 서산 6년근 인삼, 서산 6쪽마늘, 그리고 서산 생강을 이용한 생강한과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서산의 뜰부기쌀은 밥맛 좋은 품종만을 엄선하여 유기물이 풍부한 간척지에서 키토산, 목초액 등 친환경 자재로 생산한 고품질 쌀로, 연중 초저온 냉각저장시스템으로 저온관리(15℃)하여 사계절 햅쌀 밥맛이 유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뜰부기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브랜드 쌀에 선정되었으며, 호주 시장에서 한국 쌀 점유율 1위를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뜰부기쌀을 가

공한 '뽕부기쌀 쌀국수'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둘째, 서산 6년근 인삼은 기후와 토양조건의 혜택, 즉 여름에도 서늘한 서해 바닷바람의 영향과 유기질 함량이 풍부한 황토질로 인하여 조직이 충실하고 향이 강하며, 유효사포닌 함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 때문에 서산 6년근 인삼은 전국 6년근 인삼 총생산량의 약 15%을 차지하여, 서산을 한국의 대표적 인삼고장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셋째, 서산 6쪽마늘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산은 해양성 기후와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어, 인삼 외에도 마늘, 생강, 화훼 등 식물 재배의 최적지이다. 서산의 6쪽마늘은 한국식품연구원의 분석 결과 위암 등 암세포를 죽이는 치사율이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리신(allicin) 함량이 풍부하여 수막염이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유해균에 대한 항암, 항균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서산 6쪽마늘 또한 발효 숙성을 거친 '서산흑마늘'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넷째, 서산생강과 이를 이용한 생강한과이다. 서산 생강한과는 서산에서 생산된 생강을 통해 생강의 독특한 향과 맛을 가미하여, 기존 한과의 느끼한 맛을 없애고 보다 건강을 생각하는 먹거리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특히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산시를 방문했을 당시 식탁에 올라 유명세가 알려지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까지 소비층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서산 생강한과는 '2015 국가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전통식품 부문 대상을 받으면서, 2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연간 40억 원 이상의 매출을 통하여 서산의 대표 향토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음, 축산부문의 대표적 먹거리로는 서산우리한우가 있다. 서산우리한우는 서산시·서산우리한우사업단·한우개량사업소가 만들어 낸 명품한우 브랜드로 우량 혈통 한우를 30개월 이상 장기 비육하여 1등급 이상 고급육만을 선별·제공하고 있다. 특히 서산우리한우는 불포화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이 높아 건강에 유익하고, 고기의 맛과 풍미를 결정하는 올레인산이 풍부하여 씹을수록 깊고 부드러운 순수한우의 뛰어난 맛을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마지막으로 수산부문 역시 풍부한 먹거리를 자랑하는데, 그중에서도 서산어리굴젓은 조선시대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려졌던 진상품으로, 특히 간월도의 굴은 색깔이 거무스레하고 알이 작은 편이며, 타 지역 굴과 달리 몸에 물날개(미세한 털)가 많이 돌아 있어 양념이 고르게 되기 때문에 발효가 잘 되어 맛이 뛰어난 것으



▲ 서산의 대표 먹거리 - 서산인삼, 서산한우, 어리굴젓, 굴밥, 생강한과

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간월도의 굴과 간척지에서 생산한 쌀로 지은 영양굴밥은 서산의 또 다른 별미이다.

서산의 특산물은 앞서 소개한 것들을 포함하여 다양한데, 참고로 최근 선정된 서산의 '9품9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9품(品)에는 6쪽마늘, 생강, 갯벌낙지, 6년근 인삼, 뜸부기쌀, 달래, 황토 알타리무, 팔봉산 감자, 감태, 그리고 9미(味)에는 간장게장, 어리굴젓, 게국지, 밀국낙지탕, 서산우리한우, 우럭젓국, 생강한과, 마늘각시, 영양굴밥이 선정되어 풍부한 먹거리·살거리를 자랑하고 있다.

문화가 어우러진 국제관광도시

서산이 가진 자연환경과 역사문화는 서산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서산9경으로 이름 지어진 관광자원은 제1경 해미읍성에서부터 시작한다. 해미읍성은 성곽둘레 1,800m, 높이 5m, 면적 20만㎡로 현존하는 가장 잘 보존된 평성으로, 선조 12년 이순신 장군이 군관으로 근무하기도 했으며, 서산의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역사체험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또한 1866년부터 1882년 사이 천주

교 박해 때 1천여 명의 신자를 생매장한 곳인 천주교 순교 성지가 인근에 있는데, 2014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곳을 방문하여 명실 공히 세계적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제2경은 '백제의 미소'로 유명한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이다. 국보 제84호이며 우리나라 마애불 중 가장 뛰어난 백제후기의 작품으로 얼굴 가득히 자애로운 미소를 띄고 있어 당시 백제인의 온화하면서도 낭만적인 기질을 엿볼 수 있다.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웃는 모습이 각기 달라지며 빛과의 조화에 의하여 진가를 보이도록 한 백제인의 슬기가 돋보이는 우리 민족의 자량이다.

이에 이어서 세계적 철새도래지 천수만에 위치한, 버드랜드와 함께 관광명소화

가 추진되고 있는 제3경 간월암, 충남 4대 사찰 중 하나로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제4경 개심사, 하늘과 바다 사이 여덟 봉우리로 우뚝 솟은 제5경 팔봉산, 유서 깊은 문화유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제6경 가야산, 몽돌 해변과 코끼리 바위로 잘 알려진 제7경 황금산, 한국 축산업의 미래, 드넓은 초지가 아름다운 제8경 서산한우목장,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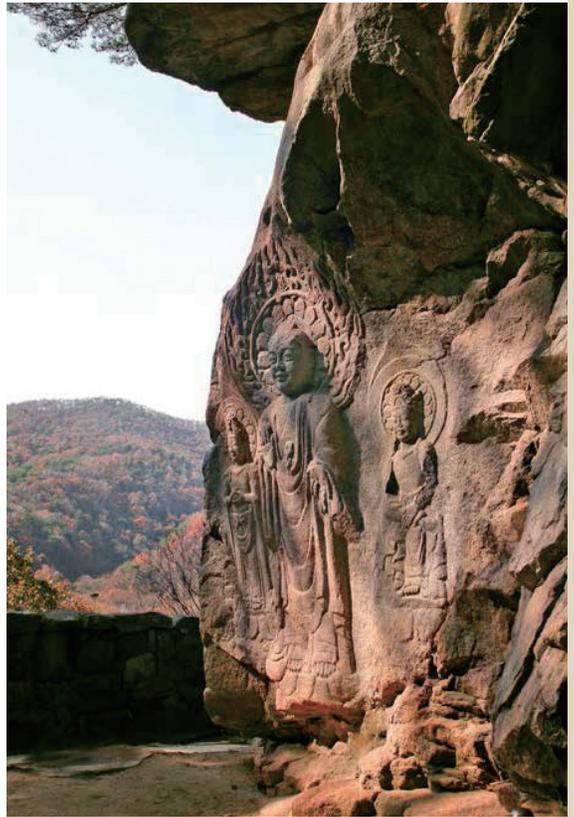


▲ 해미읍성



▲ 해미읍성의 전통문화 공연모습

리고 서산의 북쪽 관문인 제9경 삼길포항이 어우러져 서산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다. 서산은 이러한 역사문화와 환경자원을 토대로 서산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삼길포 우럭축제, 서산 6쪽마늘축제, 팔봉산감자축제, 서산 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 국화축제, 류방택 별 축제 등 다채로운 축제체험이 가능하다. 더하여 전통문화공연 상설운영(해미읍성), 전통가옥과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 해상자원을 통한 낚시 등 레저체험이 상시적으로 가능하고, 앞서 소개한 풍부한 먹거리를 통하여 그야말로 오감이 만족하고, 감동받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 서산 용현리 마에여래삼존상

자료제공 : 서산시청

정리 : 권오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제4차
연구심의위원회
개최**

일시 2015년 3월 19일(목), 23일(월)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5년 3월 19일 목요일과 23일 월요일 양일에 걸쳐, 연구원 5층 세미나실에서 '제4차 연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자치부-사도 정책연구과제 착수보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제6차
정책아이디어
워크숍 개최**

일시 2015년 3월 26일(목) 9:30 ~ 10:30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5년 3월 26일 목요일, 연구원 5층 세미나실에서 '제6차 정책아이디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이 '주민행복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1차
정책분석평가방법론
워크숍 개최

일시 2015년 4월 2일(목) 10:30 ~ 12:30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2015년 4월 2일 목요일, 연구원 5층 세미나실에서 '제1차 정책분석평가방법론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워크숍은 진윤아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연구교육센터 센터장의 '메타분석의 이해와 적용'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제7차
정책아이디어
워크숍 개최

일시 2015년 4월 9일(목) 9:30 ~ 10:30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5년 4월 9일 목요일, 연구원 5층 세미나실에서 '제7차 정책아이디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동체 중심의 지역복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17대
하혜수 원장 취임**

일시 2015년 4월 13일(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17대 원장에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취임하였다.



**제2차
정책분석평가방법론
워크숍 개최**

일시 2015년 4월 16일(목)
10:30 ~ 12:00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정책
분석평가학회는 2015년 4월 16
일 목요일, 연구원 5층 세미나실
에서 '제2차 정책분석평가방법론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워크숍은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
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의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의 이해와 적용' 강의와 토론
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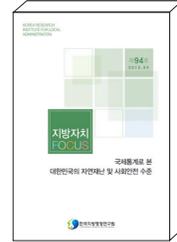


발간물

「지방자치 Focus」 제93호 발간

제 목 지자체 성과예산제도의 쟁점 및 효율적 운용방안

저 자 이효(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자치 Focus」 제94호 발간

제 목 국제통계로 본 대한민국의 자연재난 및 사회안전 수준

저 자 안영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전통일연구센터)

KRILA 교육연수 [담당자: 김유숙 02-3488-7353]

상반기 교육일정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일정
창조와 소통의 정부3.0	3일(비합숙) (21시간)	제1기 2. 25(수) ~ 2. 27(금)
		제2기 4. 8(수) ~ 4. 10(금)
		제3기 5. 20(수) ~ 5. 22(금)
지방규제개혁	3일(비합숙) (19시간)	제1기 4. 1(수) ~ 4. 3(금)
		제2기 5. 6(수) ~ 5. 8(금)
		제3기 6. 17(수) ~ 6. 19(금)
사업예산과 복식부기회계	3일(비합숙) (21시간)	제1기 3. 4(수) ~ 3. 6(금)
		제2기 4. 15(수) ~ 4. 17(금)
		제3기 5. 27(수) ~ 5. 29(금)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3일(비합숙) (21시간)	제1기 4. 22(수) ~ 4. 24(금)
		제2기 6. 10(수) ~ 6. 12(금)
주민행복 마을만들기	3일(비합숙) (21시간)	제1기 3. 25(수) ~ 3. 27(금)
		제2기 4. 28(화) ~ 4. 30(목)
		제3기 6. 3(수) ~ 6. 5(금)
내부통제	3일(비합숙) (21시간)	제1기 5. 13(수) ~ 5. 15(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 실천포럼 알림마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책자 및 소식지를 무료로 홍보해 드립니다. 홍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Tel. 02-3488-7361 / yjtak@krila.re.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 대한민국



정부 3.0 체험마당

2015. 4.30 | 목 | ▶ 5. 3 | 일 | coex 3층 (C3, C4 hall)

© 정부3.0 추진위원회



미성년 자녀 양육비, 이제 손쉽게 받으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전문가들이 도와드립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 그동안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으로 양육비를 포기한 양육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양육비 이행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당사자 간 협의 및 소송, 채권추심, 제재조치 등의 방법으로 비양육부·모(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지원합니다.

상담 및 서비스 신청방법

전화 1644-6621

온라인 www.childsupport.or.kr

방문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양육비이행관리원 (서울지방조달청 내) 4, 6층
※ 사전 예약 필수

서비스 지원 대상은?

-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한 양육부·모입니다.
- 신청이 많은 경우 저소득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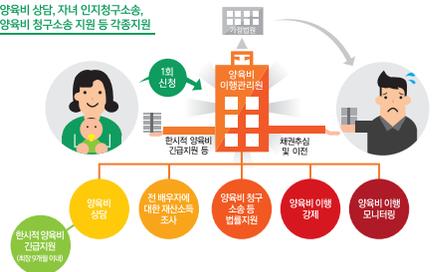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양육비 이제 손쉽게 받으세요!



양육비 이행 지원 절차는?

- 1회 신청으로 상담, 협의 지원 및 채권추심 등을 일괄하여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양육부·모-비양육부·모가 갈등 없이, 상호이해와 존중을 통해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 하는 것을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 양육비 불이행시 이행 확보 조치를 지원합니다.

양육비 상담, 자녀 인정구조소송, 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등 각종지원



※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에게 양육비 청구 가능



지난호 Issue
지역행복
생활권 협력

03

지방자치실천포럼

소통과 융합의
지방자치

: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이슈대담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 김선교 양평군수

